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12. 8. Vol. 48

■ 농정이슈

한·호주 FTA 발효 (12.12.) 합의 등

■ 정책브리핑

2015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

■ 연구지원

2014년 김장채로 및 김치 수입동향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호주 FTA 발효 (12.12.) 합의

- [국회 본회의(12.2.)에서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통과] 중국일본**보다 가격경쟁력 제고 등 통해 △시장 선점확보 유리, △투자 활성화 기대,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기대

※ 서명: 한·호주 FTA(4.8.), 한·캐나다 FTA(9.22.)

※※ (일본) 일·호주 FTA 2015.4월 이전 발효시키려 하고, 캐나다와는 아직 협상 중

- [한호주 FTA 발효(12.12.) 합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 호주와 교환(12.3.), 한-호주 FTA 발효(12.12.)키로 합의

- [한캐나다 FTA 발효(2015.1.1.) 추진] 캐나다 의회 심의 완료(11.25.) 이후 내각 승인(12.중순 예정)만 남은 상황

※ 한·호주·캐나다 FTA 모두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자료 : KBS SBS YTN(2014.12.2.) / 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12.3.) / 농민신문머니투데이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4.12.5.)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호주캐나다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한호 FTA는 12.12일, 한캐 FTA는 내년 1.1일 발효 추진, 세계 12위, 11위 경제대국과의 FTA로 교역투자 확대 기대 -」 (2014.12.4)

□ RCEP 제6차 협상 개최

- [RCEP 제6차 협상 개최, 12.1~5., 인도]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 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적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 논의

※ (한국)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참석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 달성)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 중심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 추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

※ (향후 계획) 2015년 공식 협상(4차례), 장관급 회의(2차례), 정상회담(1차례) 개최

자료 : 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12.1.)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협상 개최’ -2014.12.1.~12.5.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Greater Noida) -」 (2014.12.1.)

㉔ 농정이슈

□ 박대통령, 지역희망박람회 참석

- **[박대통령, 지역희망박람회 참석, 12.3.]**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원천, 또한 간담회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정책 및 이에 상응한 중앙정부의 맞춤형·패키지 지원 재천명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반자적 관계 강조
- **[농업 관련 언급 내용]** △낙후지역 주민 위한 LPG 가스 공급, 안전시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적극 시행, △2015년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생활권 취약지역 집중지원, 지자체도 적극 동참 당부

자료 : MBCSBS(2014.12.3.) /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2014.12.4.)

참고 : 청와대 뉴스_「2014 대한민국 지역박람회 격려사,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 참석」(2014.12.3.)

□ 국내산 쌀 잔류농약 검사 결과 99.5% 안전 판정

- **[2013-2014년도 국내산 쌀(12,353건)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잔류허용 기준치 적합 99.5%, 기준치 초과 0.5%(56건)은 생산 단계에서 즉시 출하를 차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포레이트 특별조사*(2014.5., 536건) 실시 결과]** 2013년산 쌀 대상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합동으로 농약성분의 하나인 포레이트** 특별조사 결과 **모두 적합 확인**
 ※ 벼짖을 먹인 가축이 농약(포레이트) 중독으로 폐사·확인됨에 따라 오염벼짖 생산 지역 중심으로 전국 쌀에 대한 안전성 확인 위해 실시
 ※※ 2013년도 벼멸구 발생지역에서 벼멸구 방제 위해 농업인이 임의로 사용했던 농약의 주성분이며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고, 동물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잘 축적되지 않음.

자료 : KBS(2014.11.28.) / 서울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4.11.29.) / 농민신문(2014.12.1.) / 한국 농업신문(2014.12.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국내산 쌀 안심하고 드세요 - 농식품부식약처, 2013-2014년 국내 생산 유통 쌀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2014.11.29.)

〈쌀 안전성 및 한우폐사 원인 규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해명〉

- **[쌀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정부 긴급 조사에서 포레이트 성분만 안전성 조사 실시하는 등 2013년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 2013년도 부적합(0.8%)을 받은 쌀의 양은 10kg짜리 3,340만 포대에 해당 ↔ **(정부입장)** 2013-2014년도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1,558건·1,590건) 결과 각각 부적합 1건(0.06%)·부적합 무, 생산단계 부적합품(2013년 0.8%)은 폐기 또는 출하연기 통해 시중유통 사전 차단

㉔ 농정이슈

- **[한우폐사 원인규명 관련] (언론보도)** 농약 오염 벼짖으로 인한 한우폐사 범위 축소, 한우 폐사원인을 포레이트로만 한정하는 등 정부 조사 부실 ↔ **(정부입장)** 소 폐사는 다양한 원인(전염병, 일반질병, 사고)으로 발생, 2013.11. 이후 소 폐사 원인이 농약 중독증(검출 포함)으로 진단된 농가는 7호(총 49마리), 검사한 시료 달라 채취 시기 및 검사 시점 상이해 검사결과 다를 가능성 내재

자료 : KBS(2014.11.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우 집단폐사의 두려운 진실”(KBS2 추적60분, 11.29) 보도 관련 해명자료」(2014.11.30.)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확정·발표, 12.4.]** 고의적인 부정수급 시 사업·지원 자격 박탈, 징벌적 과징금 5배 부과 등 벌칙 대폭 강화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올해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주요 대책 ■

구분	대책
부정수급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 확대(1억원 → 2), 보상금 도입(20억원 한도)
보조사업 선정 심사평가 대폭 강화	-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3년마다 사업 지속 여부 심사하는 일몰제 도입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사감독 및 벌칙 강화	- 사업자 이력, 재무상태 등 정보공시 의무화 - 부정수급액의 5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집행점검 상시화체계화, 사후관리 절차 강화	100억 원 이상 사업 연1회 이상 점검 -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료 : KBS(2014.12.4.) /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일보(2014.12.5.)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발표 -」(2014.12.4.)

〈농업경영체 통합DB 활용 점검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조·건·불·라·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점검 실시 결과]** 조사대상 농지 87천 ha 중 부적합 농지 **17천 ha(19.5%) 부적합 신청 확인, 95억 원 부당수령 사전 방지***
 ※ (조사기간 및 대상) 5.15.~10.7. / 직불금 신청내용과 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부적합신청 개연성 높은 농가 선정 집중 조사

㉔ 농정이슈

- **[직불제 수혜농가 증가]** 농업경영체 정보등록과 직불금 신청 통합, 마을방문 접수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에 기인

- **[발직불제 신청농가 증가]** (2013) 246천 호 → (2014) 382천 호, 전년대비 55% ↑

자료 : KBS(2014.12.4.) / news1-NEWSis연합뉴스(2014.12.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경영체 통합DB 활용 점검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2014.12.5.)

□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12.2.]**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 반영, 대부분 2015년부터 시행 예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 변경된 세법개정안(농업관련) 주요 내용 ■

항목	현행	수정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	• 영농자녀 증여받는 농지 감면대상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이내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소득법인세: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 감면대상농지 범위 확대 - 29,700㎡ 이내 → 4만㎡ 이내 • 지방세 조세감면 추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1억 원 이하	60% (2014.12.31까지 적용*)
	1억 원~2억 원	50%
	2억 원 초과	40%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1억 원 이하	60%
	1억 원~2억 원	55%
	2억 원 초과	45%
* 2015년부터 공제한도 50% 적용		※ 2015.12.31.까지 한시 적용
• 법인 사업자: 공급가액의 30%		• 법인 사업자: (최대)

[기타] • 퇴직소득 공제를 조정: 급여수준에 따라 (현행) 15~100% → (수정안) 35~100%
•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이 중 개별소비세 594원 부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2016.12.31.까지)

자료 : 국민일보농민신문매일경제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과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4.12.3.)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4년도 세법개정안(9개) 본회의 상정」(2014.12.2.)

□ 부정·불량 농약 유통·사용 신고제도 정비

- **[농진청, 부정·불량 농약 유통·사용 신고 제도 정비]** 농업인들의 피해 방지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 구축,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 (기존) 100만 원 → (변경) 200만 원 상향 조정(11.21.부터 시행)

※ 밀수 농약은 주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농약,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유입

㉔ 농정이슈

자료 : 뉴스와이어(2014.11.28.) / 농수축산신문(2014.12.2.)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12.3.)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4.12.5.) / 농촌여성신문(2014.12.8.)

참고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_「부정·불량 농약 유통·사용 신고해 뿌리 뽑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 신고센터 정비·밀수농약 포상금 상향 조정 -」(2014.11.28.)

□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검증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12.4~14.]**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검증 마무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행 후 접수된 의견 검토하여 동등성 검증결과에 반영

※ 협정 추진 절차: 사전협의 → 신청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 → 현장검증 →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등) 상호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결과 검토 → 협정 체결

- **(주요 내용)**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 △양국의 유기 규정에 적합하게 수입된 유기원료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협정 유효기간(3년) 등

자료 : NEWSis연합뉴스(2014.12.4.)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관원,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2014.12.4.)

□ 환경부, 도로는 증가한 반면 농지는 감소

- **[환경부, 「통계로 본 국토자연 환경」 발간, 12.4]** 2008~2010년 분석, 전체 국토(101,102.5km²)에서 산림지역 67.8% > **농업지역 21.1%** > 시가지건조지역(건조물로 덮인 곳) 4.1% > 초지 2.9% > 수역 2.1%, > 나지(초목 없는 험한 땅) 1.6% > 습지 0.3% 순

- **(산림면적, 2010 기준) 636만9천ha**, 전체 국토면적의 64%, 1960년 대비4.95% ↓

- **(농도지역* 면적, 2012 기준) 농업지역 46.6%** > 관리지역 25.5% > 도시지역 16.6% > 자연환경보전지역 11.4% 순

※ 도시계획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기함으로써 각 지역에 적합한 용도에 쓰이도록 지정한 곳

- **(지목(토지 이용 용도)별 면적, 2013 기준)** 임야 64% > 답 11.6% > 전 7.7% 순

※ **(지목별 면적, 1980~2013 기준) 증가:** 도로 117.07% (1,639km²), 대지 66.88% (1,151km²) / **감소:** 농지(전) 17.25% (1,618km²), 농지(답) 8.66% (1,102km²), 임야 2.95% (1,953km²)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NEWSis서울신문-연합뉴스(2014.12.5.)

참고 : 환경부_「통계로 본 국토자연 환경」(2014.12.4.)

㉔ 농정이슈

□ 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 **[충북 진천군 돼지사육농장(15,884두) 구제역(FMD) 확진, 12.4.]**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 신고(12.3.) 후 정밀조사 실시 결과 **구제역(혈청형: O type) 확진**, 국내에서 집중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 낮아**
 - **(방역조치)** 구제역 감염 돼지 살처분,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 자료 : KBS·SBS·YTN·문화일보(2014.12.4.) / 국민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 뉴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4.12.5.)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신고, 충북 진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2014.12.4.)

□ 포르투갈에서 광우병 발생

- **[포르투갈*에서 광우병 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11.28.)된 바에 따르면 1998년생 수소에서 발생, 예찰프로그램상의 긴급 도축소에 해당돼 정밀 검사 결과 광우병 확진
 - ※ 최근 포르투갈에서는 2013년 제외하고 거의 매년 광우병 발생, 소해면상뇌증(BSE)인 광우병은 동물의 뇌와 척추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 농식품부, **포르투갈 등 EU 소와 소고기는 2000.12.30.부터 국내 수입 금지**
- 자료 : YTN·국민일보·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헤럴드경제(2014.12.1.)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포르투갈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2014.11.30.)

㉔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2015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2.4.)

□ 개요

- **[2015년 총지출 규모] 14조 431억 원**, 2014년 대비 3.0% ↑
- **[20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 19.3조 원**, 2014년 대비 3.1% ↑
 - ※ 국가전체총지출(375.4조 원)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비중 5.1%, 농식품부 비중 3.7%, 전년대비 각각 0.2% ↓, 0.1%p ↓
- **[중점 편성 내용]**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집중, △시장개방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가축질병·재해대비 등 예산지원 강화한 반면, 한중 FTA 대비 발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한 예산과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흡

□ 주요 특징

-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7,240억 원 → 7,705, 6.4% ↑
 -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 관련 투자 확대(788억 원 → 868)
 - ICT 융복합(321억 원 → 323), R&D(2,055억 원 → 2,242), 생명산업(562억 원 → 568) 등 농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 적극 확충**
-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 3조 4,631억 원 → 3조 6,180, 6.2% ↑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투자 강화
 - 영연방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1조 1,656억 원 → 1조 1,301)
 - 2015년 예산은 기존 계획대비 2,313억 원 증액(지원규모로는 2,577억 원 증액)
 - 농식품 수출확대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 원 → 5,867)
-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 지원 강화]** 2조 1,406억 원 → 2조 2,237, 4.5% ↑
 - 재해예방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투자 확대(1조 2,653억 원 → 1조 4,225)
 - ※ 다목적농촌용수개발(2,600억 원 → 3,050), 수리시설개보수(4,800 → 5,487), 배수개선(2,900 → 3,160),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163 → 263) 등

㉔ 정책브리핑

-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5,504억 원 → 5,749)
- AI 등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 위한 지원 확대(1,201억 원 → 2,334)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3조 7,785억 원 → 3조 9,140, 3.6% ↑
 -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 2,924억 원 → 1조 6,396)
 - ※ 쌀고정직불금(90만 원/ha → 100, 7,740억 원 → 8,450)
 - ※ 변동직불금(쌀목표가격 188,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 200억 원 → 1,641)
 - ※ 발농업직불(지목 및 품목확대: 지목상 발·26개 품목 → 사실상 발·전품목, 논이모작 직불 40만 원/ha → 50, 1,347억 원 → 1,929)
 - ※ 유기직불(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 → 6년차 이후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 원 → 2,826)
 - ※ 금리인하: 농업경영회생자금(3% → 1), 농기계구입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 분뇨처리시설,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창업(3% → 2), 축산1%자금 확대(3% → 1)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14개 금리 인하
 - 농지연금 확대(339억 원 → 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 제도개선: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 **[농촌의 특성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4,277억 원 → 4,565, 6.7% ↑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3,241억 원 → 3,367),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6 → 84) 등
 - ※ 연금보험: 지원인원 확대(291천 명 → 311),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지원한도액 상향(38,250원 → 40,950)
 - ※ 가사(고령·취약) 15천 가구, 12천 원, 12일 / 영농(사고·질병) 17천 가구, 60천 원, 10일
 -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 원 → 4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장·운영 확대(21 → 24)
 - ※ 공동이용시설: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18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 **[교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 7,723억 원 → 8,401, 8.8% ↑
 -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 원 → 3,437)
 -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정보 지원과 같은 新소비자 정책 추진(66억 원 → 67)

㉔ 정책브리핑

- **[농산물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1조 5,840억 원 → 1조 6,216, 2.4% ↑
 -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
 -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 원 → 122)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 원 → 470)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 거래단위 규모화 및 경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 대신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 1조 5,162억 원 → 1조 4,589, 3.8% ↓
 - FTA 대응 국내보완대책 효율적 추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 대책 마련
 -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등 가축방역 강화(2,615억 원 → 3,044)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 9개 사업 458억 원, 내역사업 632억 원
 - 對중국 수출확대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과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 원)
 -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 원)
 -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 방지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12억 원)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 지원센터 운영(10억 원)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 원)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 원)
 -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 원)

㉔ 정책브리핑

【2015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주요 증액사업(38개)	2015년		주요 감액사업(8개)	2015년	
	정부안	국회증액		정부안	국회감액
증액 소계	3,416,535	333,000	감액 소계	1,194,117	△383,914
수리시설유지관리	159,038	2,000	농업기초및소비촉진제고	9,354	△1,000
대단위농업개발(농특)	100,600	10,900	농업자금이자보전	291,350	△26,197
시도가축방역	99,964	3,800	재해대책비	217,600	△108,400
농산물원산지관리	14,875	400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77,250	△2,700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5,000	900	해외농업개발	20,650	△4,000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6,289	7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15,363	△151,217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8,905	500	살처분보상금	150,000	△90,000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8,516	1,500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12,550	△400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24,303	500			
농업자금이자보전	291,350	17,400			
도시농업활성화	1,280	200			
도농교류활성화	14,339	300			
발농업직불제	112,831	80,10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8,651	300			
취약농가인력지원	8,400	210			
농기계임대	21,000	1,000			
들녘경영체육성	4,000	500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805	390			
친환경농자재지원	227,802	800			
다목적농촌융수개발	280,000	25,000			
농촌융수관리	30,880	2,200			
농촌융수이용체계제편	15,000	2,500			
임진강수계농촌융수공급	11,400	2,600			
수리시설개보수	529,700	19,000			
배수개선	295,000	21,000			
쌀소비활성화	5,500	50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1,040	1,300			
농산물마케팅지원	3,325	500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00	500			
전통발효식품육성	11,250	1,200			
농지규모화	135,120	53,500			
대단위농업개발(농지)	57,790	2,100			
새만금지구	263,500	20,200			
말산업육성	29,950	7,100			
축산자조금	21,993	1,00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350,000	50,000			
축사시설현대화	154,281	100			
중자산업기반구축	8,898	300			

㉔ 정책브리핑

2015년 예산 주요 내용

□ 개요

-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12.2) 거쳐 확정] 당초 정부안보다 △3.6조 원 감액 대신, 주요 정책사업 중심으로 3.0조 원 증액, 총 △0.6조 원 감소(376.0 → 375.4조 원)
 - 총수입(382.7 → 382.4조 원) 및 총지출(376.0 → 375.4조 원)은 정부안 대비 감소
 - 재정수지(33.6 → 33.4조 원) 및 국가채무(570.1 → 569.9조 원)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주요 내용

【주요 국회 증액내역】

구분	분야	국회 증액내역
서민생활 안정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료 인상(3%, 450억 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 원) 및 시범사업 실시(20억 원) 예정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15 → 17만 원/월) 인상*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 105억 원 지원(7.5만 원/월) ※ (2014) 1,356억 원 → (2015정부안) 1,343 → (2015최종) 1,522 - 아동학대 예방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2014) 18억 원 → (2015정부안) 169 → (2015최종) 252
		• (노인)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 및 노인시설 지원 확대 -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 → 6개월) ※ (2014) 103억 원 → (2015정부안) 127 → (2015최종) 233 -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4,716개소, 개소당 190만 원) ※ (2014) 293억 원 → (2015정부안) - → (2015최종) 298
		• (농어민) FTA 확대 및 쌀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 지원(3,500 → 4,000억 원) 및 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 기존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 유도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축산경영종합자금(3 → 2%) 및 긴급경영자금(3 → 1.8%) 등 - 쌀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 → 3.5만 원/3.3m ²) 및 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40 → 50만 원/ha) - 농업농촌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위해 6차 산업화와 귀농귀촌 지원* 확대하여 농촌 활력제고 및 농업 체질개선 뒷받침 ※ (2014) 421억 원 → (2015정부안) 531 → (2015최종) 542
		•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확대 ※ (2014) 34억 원(56개소) → (2015정부안) 34(56) → (2015최종) 37(61) ※※ (2014) -(분권교부세 2,583억 원) → (2015정부안) 4,085 → (2015최종) 4,280

정책브리핑

		• (기타)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조기 정착 위해 기존의 생활안정 키트 외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 추가 지원 ※ 탈북민 생활용품 지원: (2014) 3억 원 → (2015정부안) 6 → (2015최종) 16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인상(+20만 원) ※ (2014) 60억 원 → (2015정부안) 65 → (2015최종) 77
	• 생계비 부담 완화	• (주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 추가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 (보육) 육아부담 완화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본격 지원(50억 원) • (의료)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 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 원) 신규지원 등 의료비 경감 위한 공공의료 지원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85 → 250%),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완화 ※ 기초생활보장급여: (2014) 8.2조 원 → (2015정부안) 8.7 → (2015최종) 8.8 • (문화접근성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 (2014) 518억 원(144만 명) → (2015정부안) 540(151) → (2015최종) 575(161) - 문화재 원형보전 등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 확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확충 등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지원 ※ 문화재 보수 정비: (2014) 2,338억 원 → (2015정부안) 2,750 → (2015최종) 2,800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확충: (2014) 29억 원 → (2015정부안) 29 → (2015최종) 40 - 한국 관광문화 홍보 위해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 ※ (2014) 67억 원 → (2015정부안) 173 → (2015최종) 262
경제활성화	•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 (2015정부안) 160억 원(0.6만 명) → (2015최종) 220(0.8) - 국제전사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신규, 30억 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 (2014) 409.6억 원 → (2015정부안) 431.4 → (2015최종) 445.8 • (고용안정 제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 최저임금 100% 적용(2020년~)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 원) 지급 확대 ※ 고령자 고용지원금: (2014) 15억 원 → (2015정부안) 3 → (2015최종) 54 - 최저임금 준수 지도 등 통해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 점검: (2015정부안) 100명 → (2015최종) 180, 일반신고센터: (2015정부안) 10개소 → (2015최종) 15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위한 SOC 투자 0.4조 원 확대 (24.4 → 24.8조 원) ※ 고속도로 건설: (2014) 14,766억 원 → (2015정부안) 14,470 → (2015최종) 15,226 -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 ※ 경자유역 인프라: (2014) 245억 원 → (2015정부안) 137 → (2015최종) 191 - 국토의 균형발전 위해 접경권 발전 사업 지원 강화 ※ 접경권 발전 지원: (2014) 166억 원 → (2015정부안) 170 → (2015최종) 190 - 국제·국내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시설·운영비 확대

정책브리핑

		※ 평창 올림픽: (2014) 1,346억 원 → (2015정부안) 2,874 → (2015최종) 2,974 ※ 광주 U대회: (2014) 819억 원 → (2015정부안) 291 → (2015최종) 421 • (지방교육재정 지원)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감안하여 지방채 이자 지원* 및 대체사업 지원** ※ (2014) → (2015정부안) → (2015최종) 333억 원(목적 예비비) ※ (2014) → (2015정부안) → (2015최종) 4,731억 원(목적 예비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내수기반 확충 위해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 중소기업 판로개척 위해 공중파 TV 등 통한 중기제품 홍보 지원 강화 ※ (2014) 22억 원 → (2015정부안) 22 → (2015최종) 32 - 작업장 환경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공인 특화 지원 확대 ※ (2014) 28억 원 → (2015정부안) 260 → (2015최종) 285 • (R&D 투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산업 육성 투자 확대 - 3D 프린팅, 항공우주부품,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 개발 촉진 ※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2014) 60억 원 → (2015정부안) 215 → (2015최종) 315 ※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 (신규) 20억 원 -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발전 위한 R&D 투자 확대 ※ 경제협력권 사업 등 지특회계 R&D: (2015정부안) 14,545억 원 → (2015최종) 15,245
안전 사회 구현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안전투자 재원 확보)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신규 3,141억 원) - 지자체의 소방안전 투자소요,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 (안전투자 확대)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 위한 시설투자 확충 -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2014) 3,524억 원 → (2015정부안) 3,816 → (2015최종) 3,897 ※ (2014) 4,800억 원 → (2015정부안) 5,297 → (2015최종) 5,487 -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10억 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OCTV) 구축(+5억 원) 등 안전사고 대응 강화
	• 생활속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 예방노력 강화 -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2014) → (2015정부안) 30억 원 → (2015최종) 105 -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015년까지 완료하여 화재피해 등 방지 ※ (2014) 12억 원 → (2015정부안) 12 → (2015최종) 30 - 파출소지구대 신증축(2015최종 477개) 통해 치안 역량 강화, 생물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생물테러 대비: (2014) 59억 원 → (2015정부안) 59 → (2015최종) 81 -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위한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운영 지원 ※ (2014) 0.5억 원 → (2015정부안) 0.5 → (2015최종) 14 • (재외국민 보호) 안전담당 영상보조 인력 신규채용 등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 (2014) 51억 원 → (2015정부안) 99 → (2015최종) 103

▣ 정책브리핑

• 병영문화 및 방위력 개선	• (병영문화 개선) 군 장병 위한 안전·복지 지원 확대 -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장병 복지 향상 위해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 (2014) - → (2015정부안) - → (2015최종) 230억 원 -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 (2014) - → (2015정부안) - → (2015최종) 70억 원 ※ ※ 운영방안의 적정성, 병사 체감효과 등 판단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방위력 개선)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핵심전력 차질 없이 확충 ※ (2014) - → (2015정부안) - → (2015최종) 400억 원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2014년 대비(C-A)	증가율
총 지 출	355.8	376.0	375.4	△0.6	19.6	5.5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15.7	0.2	9.2	8.7
2. 교 육 (교부금 제외)	50.7 (9.8)	53.0 (13.5)	52.9 (13.5)	△0.1 (△0.004)	2.2 (3.7)	4.4 (37.4)
3. 문화체육관광	5.4	6.0	6.1	0.1	0.7	13.0
4. 환 경	6.5	6.7	6.8	0.1	0.4	5.5
5. R&D	17.8	18.8	18.9	0.1	1.1	6.4
6. 산업·중소·에너지	15.4	16.5	16.4	△0.03	1.0	6.8
7. SOC	23.7	24.4	24.8	0.4	1.1	4.7
8. 농림수산물	18.7	19.3	19.3	0.01	0.6	3.1
9. 국 방	35.7	37.6	37.5	△0.1	1.8	4.9
10. 외교·통일	4.2	4.5	4.5	△0.01	0.3	6.7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6.9	0.04	1.2	7.3
12. 일반·지방행정 (교부금 제외)	57.2 (21.6)	59.2 (24.5)	58.0 (23.1)	△1.2 (△1.4)	0.8 (1.6)	1.4 (7.4)

자료 : 기획재정부(2014.12.2.)

▣ 정책브리핑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2018) 확정

□ 개요

-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국무회의 통과(12.2.)해 최종 확정
 - ※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18)와 광역시·도(17)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
- **(주요 내용)**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육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 투입**
 - ※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 주요 내용

▣ 분야 및 실천과제와 주요 지표

분야(5) 및 실천과제(21)	주요 지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89.6조 원(54.2%) •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발 공동경영체 육성, 수급안정 도모	•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화: (2014) 13개소 → (2018) 100 이상 • 마을기업 : (2013) 1,119개 → (2018) 1,700 이상 •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2013) 65% → (2018) 80.5 •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2013) 76% → (2018) 81 • 농어촌 하수처리율: (2013) 62.1% → (2018) 74 • 생활공원: (2014) 45개소 → (2018) 100 •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놀이터 내 CCTV 24,860개소 설치(~2015) • 지자체에 CCTV 관제센터 230개소 구축(~2017) • 농업안전보건센터: (2013) 5개소 → (2018) 10 • 도시재생지역: (2014) 13개소 → (2018) 118 • 2018년까지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50개구 이상 신규 선정, 우수모델 발굴 • 대도시권 침투 시간대 20% 단축 → (2018) 18km/h 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37.7조 원(22.8%)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 대표산업 일자리 22만개 창출(연평균 3.0% ↑), 총생산액 286조 원 증가(연평균 6.6% ↑) • 2018년까지 비수도권 설비투자 보조비율 13%까지 확대 • 비수도권 미니 외주지역 지정: (2014) 2개소 → (2018) 10 이상 • 투자선도지구: (2014) 0개소 → (2018) 14 이상 확대 • 도시첨단산업단지: (2014) 14개소 → (2018) 30 • 2018년까지 리모델링 산업단지 25개소, 5개 융복합 집적지 조성 • 미니복합타운 지정: (2014) 5개소 → (2018) 12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100개 육성(~2017) • 10년 이내 글로벌 신약 2개, 글로벌 의약품 4개 개발 • 산학연공동연구법인설립: (2014) 5개사 → (2017) 20 이상 • 6차산업화지구: (2014) 3개소 → (2018) 16 • 6차산업화 주체(지원조직): (2014) 300개소 → (2018) 1,000 • 친환경 농업지구: (2014) 1,143개소 → (2018) 1,330 • 로컬푸드 직매장: (2014) 62개소 → (2018) 120

정책브리핑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8.4조 원(5.1%) •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 2018년까지 대학 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 육성 • 특성화 전문대학: (2014) 78개교 → (2017) 100 • 20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개, 선도전문대학 30개교 육성 • 고등학교 기업맞춤반: (2013) 741개소 → (2018) 1,000 이상 • 행복학습센터: (2014) 60개소 → (2018) 227 이상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15.6조 원(9.5%) •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지역 관광산업 육성 •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 문화도시/문화마을: (2014) 1개소/2개소 → (2018) 15/50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014) 11개소 → (2018) 70 • 2018년까지 100개 생활문화센터 신규 조성 • 작은도서관/영화관: (2014) 36개소/22개소 → (2018) 160/91 • 2018년까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1단계 사업 추진 • 2018년까지 자연미당 23개소, 생태놀이터 130, 도시 숲 965 조성 • 생태관광지역: (2014) 12개소 → (2018) 3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3.9조 원(8.4%) •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수혜자 특성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취약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4) 12개소 → (2016) 17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014) 199개소 → (2018) 237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2015) 1개소 → (2018) 6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2014) 1개소 → (2018) 10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2014) 30개소 → (2018) 4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12.2.)

연구지원

연구지원 2014년 김장재료 및 김치 수입동향

자료 : 관세청(2014.12.2.)

총괄

- **[주요 김장재료 수입량] 21,124톤**, 전년 동기대비 2.9% ↑
 - (수입가격 상승) 고추류·마늘·무·소금 / (수입가격 하락) 당근·액젓·양파·쪽파
 - 9품목 중 7품목 여전히 중국산 강세(신선양파, 액젓 제외)
- **[김치 완제품 수입량] 14,439톤**, 전년 동기대비 1.0% ↓, 수입가격 소폭 상승

연도별 김장기간(11.1.~23.) 김장재료 및 완제품 수입량 및 수입가격

구분	품목명	총량(톤)			수입가격(원/kg)			전년 동기대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중량)	2014년 (수입가격)
김장재료	전 체	28,810	20,524	21,124	-	-	-	2.9	-
	소 금	9,125	7,564	12,816	100	82	87	69.4	5.5
	당 근	6,763	6,874	5,199	697	724	538	△24.4	△25.7
	마 늘	3,481	2,904	1,602	2,503	1,044	1,230	△44.8	17.9
	무	1,935	959	748	298	349	395	△22.0	12.9
	고추류	294	552	242	12,068	9,111	10,363	△56.2	13.7
	양 파	6,995	775	238	623	775	760	△69.3	△2.0
	액 젓	65	264	163	625	690	690	△38.5	△0.0
	쪽 파	19	6	24	1,558	4,057	2,164	274.6	△46.6
완제품	배 추	50	-	-	463	-	-	-	-
	김 치	16,586	14,439	14,291	610	662	623	△1.0	△5.9

주: 김장기간은 11.1~23.(잡정치) 수치 반영(2011~2012년은 확정치)

품목별 수입량 및 수입가격

- **[소금(식염)] 12,816톤**, 87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69.4% ↑ 5.5% ↑
 - 중국산의 높은 점유율 지속, 수입가격은 2013년 감소추세 보이다가 2014년 소폭 상승
- **[당근(신선·냉장)] 5,199톤**, 538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4% ↓ 25.7% ↓
 - 거의 전량 중국산 수입, 2014년에는 태국산 당근도 소량(0.5%) 수입

- **[마늘(신선·냉장, 냉동)]** 1,602톤, 1,230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44.8%↓·17.9%↑
 - 전량 중국산 수입, 냉동마늘 91.9%의 비중 차지
 - ※ 신선마늘 3,363원/kg, 냉동마늘 1,042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4.4%↑
 - ※ 2012년 신선·냉장 마늘위주, 2013년·2014년 냉동마늘 위주로 수입
- **[무(신선·냉장)]** 748톤, 395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0%↓·12.9%↑
 - 중국산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수입가격은 상승세
- **[고추류(고춧가루, 건조)]** 242톤, 10,363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56.2%↓·13.7%↑
 - 중국산이 압도적인 비중 차지, 2014년에는 고춧가루(50.7%)가 주로 수입
 - ※ 고춧가루 10,033원/kg, 건고추 10,702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6.8%↑, 17.9%↑
 - ※ 2012년·2013년 건고추 위주, 2014년 고춧가루 위주로 수입
- **[양파(신선·냉장, 냉동)]** 238톤, 760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69.3%↓·2.0%↓
 - 신선양파는 미국산, 냉동양파는 중국산 주로 수입, 2014년에는 냉동양파 위주로 수입, 신선양파 수입량(5kg)은 미미한 수준
 - ※ 신선양파 16,042원/kg, 냉동양파 759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52.7%↑·8.6%↓
 - ※ 신선양파는 2013년 중국산과 우크라이나산 수입, 2014년에는 고가의 미국산이 전량(100.0%) 수입
- **[액젓(어류의 져)]** 163톤, 690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5%↓·0.0%↓
 - (2013년) 태국산 주로 수입, (2014년) 베트남산(64.8%)으로 1위국 교체
- **[쪽파(신선·냉장)]** 24톤, 2,164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4.6%↑·46.6%↓
 - (2013년) 태국산 주로 수입, (2014년) 중국산(50.5%) 1위
- **[김치완제품]** 14,291톤, 623원/kg,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5.9%↓
 - 전량 중국산 수입되며, 수입가격은 안정세

2014년 사회조사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결과

<보건>

- **[건강관리]** 10명 중 7명 이상은 「적정수면(76.1%)」 과 「아침식사(70.1%)」 실천
- **[흡연인구]**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 비율 22.8%
- **[음주인구]**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음주 비율 64.4%
-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생활에서 66.6% 스트레스 느껴

<교육>

- **[기대교육수준]** 대학이상 교육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과 부모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부모님(가족)의 도움」 63.0%, 「장학금」 17.7%
- **[교육 기회 충족도]** 본인의 교육기회 50.2% 「충족」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대학원 졸업의 경우 76.7% 「일치」

<안전>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모든 분야에서 2년 전에 비해 「불안」 하다 인식 높아져
-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인재(21.0%)」, 2년 전(7.0%)에 비해 3배 증가
- **[준법 수준]**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67.0%), 「타인」이 법을 잘 지킨다(34.7%)

<가족>

- **[가족 관계 만족도]** 남편은 부인에 대해 70.6%, 부인은 남편에 대해 59.8%가 만족
-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부모의 생활비 「부모 스스로 해결」 절반 넘어 50.2%
- **[가사 분담]** 남자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는 견해(42.7%)와 실태(16.4%)간 차이 많아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13~18세 「공부(52.6%)」, 19~24세 「직업(42.1%)」
-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과도한 편이다」 75.9%

<환경>

- **[현재 체감 환경]** 체감환경 「좋다」, 「녹지환경(41.2%)」 가장 높고, 「소음진동(26.9%)」 가장 낮아
-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90.5%)」에 가장 많은 노력

자료 : 통계청(2014.11.27.)

2013년 생명표 작성결과

□ 개요

- **[통계청, 생명표 작성*, 12.3.]** 현재 연령별 사망수준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의 기대여명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 ※ 기초자료: (사망자수) 2013년 성·연령별 사망자 수, (기준인구) 2013년 성·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OECD.Stat(<http://stats.oecd.org>)

□ 주요 내용

- **[2013년 출생 시 기대여명]** 남자 78.5년, 여자 85.1년
 - ※ 2012년 대비 남자 0.6년 ↑, 여자 0.4년 ↑
- **[연령별 기대여명]** 40세 남자·여자 각각 39.7년, 45.9년, 60세 남자·여자 각각 22.0년, 27.0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
 - ※ 2012년 대비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증가
- **[2013년 출생아의 80세까지 생존확률]** 남자 55.2%, 여자 76.7%
 - ※ 2012년 대비, 남자 1.9%p ↑, 여자 1.0%p ↑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2013년 출생아가 향후 악성신생물(암)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남자 28.1%, 여자 16.6%
 - ※ 뇌혈관 질환 사망확률: 남자 9.3%, 여자 11.5%
 - ※ 심장 질환 사망확률: 남자 9.1%, 여자 11.9%
- **[특정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악성신생물(암)이 제거된다면, 2013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7년 ↑, 여자 2.8년 ↑
 - ※ 뇌혈관 질환 제거된다면, 남자 1.2년 ↑, 여자 1.3년 ↑
-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 남자의 기대수명(78.5년)은 OECD 국가 평균(77.6년)보다 1.0년 높고, 여자(85.1년)는 OECD 국가의 평균(82.8년)보다 2.2년 높음.
 - ※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 6.5년, OECD 국가 평균(5.3년)보다 높으며, 일본·체코·프랑스와 유사한 수준

자료 : 통계청(2014.12.3.)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